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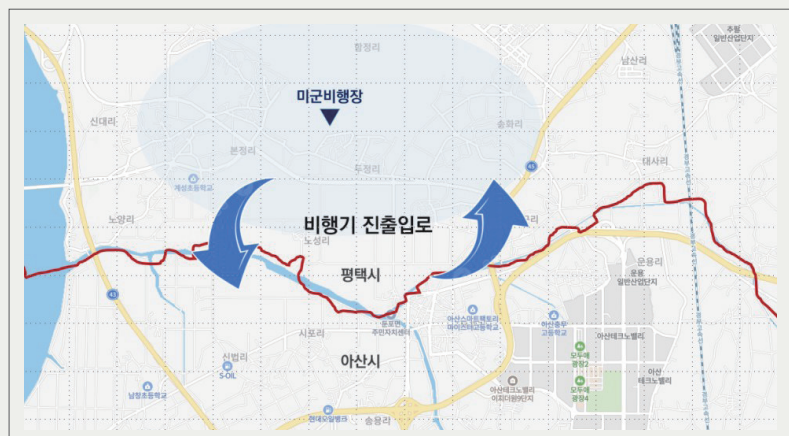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상생발전 민·관·군 소통 협력으로 풀어간다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문연구원

### 1. 직·간접 피해지역인 아산시 둔포면 일대

-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의 희생
  -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은 인접한 평택시에 입지한 미군 비행장의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 불편
  -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있지만, 미군 비행장이 평택시에 입지하고 있어 일부 가구에서만 소음피해 보상받음
  - 이는 관련 법·제도의 한계에 따른 현상으로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며,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음
- 주민피해 저감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평택시와 아산시는 인접한 동일 생활권임에도 둔포면 지역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
  - 이에 아산시에서는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피해와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중



[그림 1] 평택 미군기지에 인접한 아산시 둔포면

- 주민참여형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아산시와 충남연구원은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피해 조사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주민참여형 연구 추진
- 충남도, 아산시,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단 등이 참여하여 법·제도적 한계속에서 주민 피해에 대한 점검과 지원방안을 위한 활동 수행
-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부노출이 적은 군사시설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 파악,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 피해에 대한 외부의 집중과 지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은 향후 도내에서 발생할 유사 사례에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관련 갈등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임

## 2. 추진 현황

- 둔포면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단 구성 및 의견 수렴

-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실용적 계획 마련을 위해 둔포면 49개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4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
- 지역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함께 둔포면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개선, 개별적 보상, 미군·주민 간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그림 2] 실무추진단 개최 및 의견 수렴

- 분야별 주민피해 조사 및 분석

-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 우려를 반영하여 인근 하천 수질, 대기 환경, 소음 조사와 사회적 피해비용을 추계
- 조사결과, 하천 수질 및 대기질은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소음도 측정 결과도 평균 소음이 가장 높은 곳은 80.1웨클, 낮은 곳은 59.2웨클로 나타나 군 소음법 피해보상 규정 이하인 것으로 조사됨
- ※ 군 소음법 기준(웨클) : 1등급 95 이상, 2등급 90이상~95미만, 3등급 85이상~90미만
- 그러나 민간항공기 소음기 배상 기준은 75웨클 이상인 만큼, 지역주민들은 수치화되지 않은 소음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미군·주민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에도 둔포면 지역에 거주하는 미군과 미군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요구
  - 한·미연합사, 미육군협회와의 만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미군·주민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민간주도 협력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상호 참여와 노력 협의를 진행
- 해외사례 조사 및 충남도 적용가능성 탐색
  - 충남도, 아산시, 충남연구원을 주축으로 도내 군사시설 입지 피해지역 자치단체 관계관이 합동으로 해외사례(아시아 최대 미군 주둔지인 일본 오키나와) 조사
  - 오키나와 현을 중심으로 일본·미군과의 협의, 지역 내 개발계획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기초자치단체는 피해 보상, 정주여건 개선 사업 발굴 등의 업무로 수직적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충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군사시설 관련 피해에 대한 적극적 지원 요청 등 충남도에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 탐색과 협의 추진



- 주민참여를 통한 미군 비행장 주변지역 지원 방안 도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개방형, 소통형, 현장형 중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고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
  -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지역적, 군사적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점을 부각
  - 이에 미래 공동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민·관·군 상생 협력 증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주민건강 및 정주여건 개선, △주민참여 확대 등 4개 전략 16개 세부사업을 도출



### 3. 현장형, 소통형 정책 과제

- 도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지역은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큼
  - 충남도내에는 아산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역에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음
  - 군 소음법에 근거하여 일부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나, 보상 이외의 대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그동안 군사시설 관련 민원, 정책은 부대별 일회성, 단편성으로 추진되고 있어 아산시 사례를 계기로 관련 정책의 변화,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 피해 저감 등 정책추진과 예산확보 등 일원화된 장기적 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충남도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중임



- 주민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필요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도출된 다양한 계획들은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면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움
  -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단기적인 피해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민·관·군 간 신뢰회복을 위해 중앙정부, 충남도, 아산시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
- 미군·주민 간 상생을 위한 민간중심 협력체계 구축 지원 필요
  - 둔포면에 거주하는 미군과 가족들은 타지역에 비해 우수한 정주환경 덕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가를 즐길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한계로 지적
  - 둔포면 주민들은 미군, 그 가족들과의 교류 및 상생을 위한 장소, 콘텐츠, 추진 주체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 미군·주민 간 상생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창의성, 참여성을 바탕으로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 행정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

CNI정책현장은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정책연구와 관련된 현장 중심의 문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의성을 중심으로 한 브리프임